

주얼리업체 ‘라임’ 부당해고도 모자라 교섭 날에 폐업 서울지부, 기습 폐업 라임 사업주 처벌 촉구... “노동부 즉각 특별근로감독 해야”



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손 놓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직접 현장에 나와 정말 5명 안 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쓰는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서울 종로 주얼리업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느닷없이 폐업했다. 노동자들은 종로 주얼리 업종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곳에서 일하다 보니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실제로 5명 넘게 일하지만,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인 곳도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려 사용자가 꼼수를 부린 것.

라임 노동자인 김정봉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김정봉 부지회장은 “사측이 경영 악화를 주장하더니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고 노사교섭하다 사업주가 폐업하고 날랐다”라며 “사측은 폐업을 몰래 진행하면서 고용보험 미가입, (탈세) 무자료 거래 등을 숨기려 관련 자료들을 몽땅 파쇄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 주얼리 업체 ‘라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피 폐업한 라임 사용자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업종 특별근로감독 실시 ▲라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강력 처벌 등을 촉구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자주 나타난다.

이재현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로 주얼리 업종 노동 실태를 고발했다. 이재현 지회장에 따르면 종로 주얼리 노동자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된

이재현 동부지역지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업종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재현 지회장은 “오랜 시간 노동부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을 방치했다. 라임 폐업에도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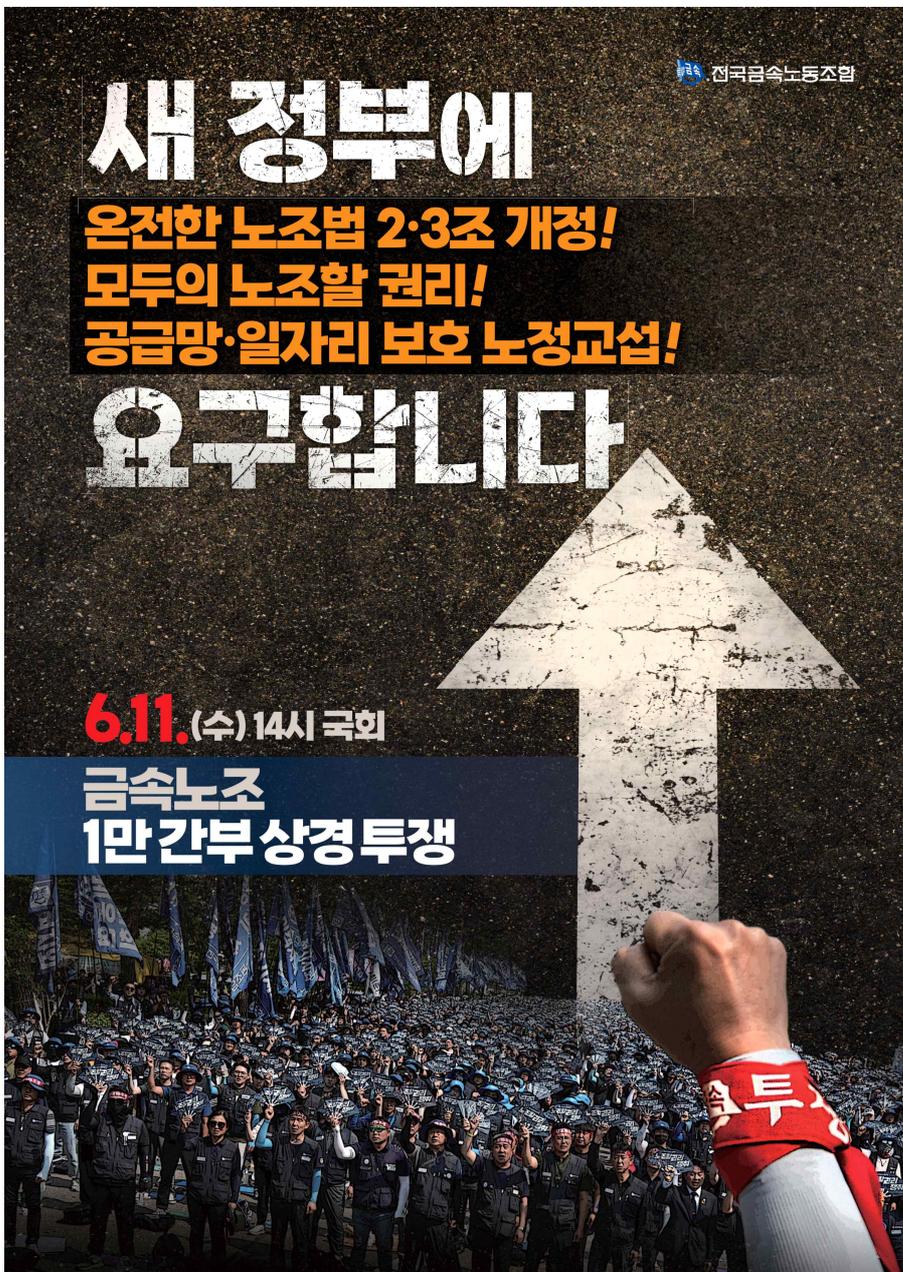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말 라임 사측은 경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알렸다. 지회는 해고만은 막고자 사측에 정부 지원 제도 신청, 단축 근무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올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라임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라임 해고 사건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라임 사측에 노동자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당해고 판정 나오자, 폐업 ...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김정봉 부지회장은 “부당해고 판정에도 사측은 노동조합 연락을 피하더니, 지노위 판정문을 받자마자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어렵게 노사교섭 날짜를 잡았지만, 사측은 뒤로 폐업을 진행했다. 교섭 당일 폐업 절차가 모두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봉 부지회장 역시 노동부



를 비판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부에 라임 등 종로 주얼리 업체에서 일어나는 불법 노동 사례를 조사하라고 여러 차례 진정서를 냈지만, 노동부는 묵인했다”라며 “주얼리 노동자들이 더는 피해 입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종로 주얼리 업체 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하라.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물려서지 않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을 노조 서울지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문제에 대해 회사도 어려운 데 답 없다,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와 현실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애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